

종합

완공 1년도 안된 국도 '부실 투성이'

광주~장성, 광주~영광 각각 19건씩 하자 화순~용포 구간도 특하면 보수공사 일쑤

지난해 완공된 광주~장성간 국도에서 19건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간 개통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하자 발생 건수가 2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열과 누수 등 하자자

발생한 전국의 도로로는 광주·전남 3곳 등 223곳에 이른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완공된 광주~장성(1번 국도)과 광주~영광(22번 국도)에서 각각 19건의 하자가 발생해 부실 시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4년 준공된 화순~용포 구간과 2006년 완공된 삼례~익

산 구간에서도 수차례 보수 공사가 이뤄졌다. 전국의 경우 화성 우정~발안(82번 국도)과 경기 이동~용인(45번 국도)의 보수 공사 건수가 각각 40건, 35건에 달하는 등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총 22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부실 사례별로는 ▲구조물 균열 93건(40.8%) ▲시멘트포광이 52건(22.8%) ▲신축 이음부 불량 31건(13.6%) 등이었다. 특히 시공불량 및 구조물 파손(30건)과 기초 침하(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실사례도 발견돼 전체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선 의원은 "완공된 지 7년도 안된 도로에서 23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내 도로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당국이 시공 과정은 물론, 안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사는 육안에 의한 것이어서 초음파 등 정밀진단을 하면 도로의 부실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부실시공은 사고발생은 물론,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토착비리 주범 하위직 공무원 전체 범죄 32% 차지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공사 관련 금품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전체 범죄의 약 32%는 하위직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공직 및 토착 비리에 대한 단속을 벌여 787명을 검거해 이 중 4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입건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공사 관련 금품수수'가 144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국가 보조금 횡령' 108명(13.7%), '단속 무마 조건 금품수수' 76명(9.6%) 등 순이었다. 토착 비리로 검거된 787명 중 공무원은 302명이었고, 특히 6급 이하 하위직이 25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별단속 기간 경찰은 경남 함안에서 담보 물건의 감정가를 부풀려 98억9천800만원을 부정대출해 주고 7억5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경진 농업 조합장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력형 토착 비리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권력을 등에 업고 서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토착 비리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공무원노조 행사

민중의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립뉴스



호남의 젓줄, 셋강 살리자

호남의 젓줄이자 영산강과 섬진강의 싹피줄이기도 한 셋강을 제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셋강 살리기 선포식'이 23일 나주 시청 강당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도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친환경적인 셋강정비 ▲자연 정화능력 향상 ▲셋강 청결운동 확산 ▲셋강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실천 4대 행동준칙'이 채택됐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토주공, 서민 상대 '高利 배상금' 쟁겨

광주·전남 공공임대 1만2천여채에 5억 부당 징수

대법원 전액 반환 판결에도 지급 미뤄

한국토지주택공사(토주공)가 최근 5년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으로 85억여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진보신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조승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부당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전국적으로 9만여 채에 85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은 1만2천298채 4억9천4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6만6천194채 2천595만원, 내방마을 2천179만원, 상무버들

마을주공1단지 1천715만원, 운남7단지 1천692만원, 운남9단지 1천401만원, 운남8단지 1천900만원, 운남10단지 839만원, 동림1지구 323만원 등이다. 불법거주배상금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해 매달 임대료의 150%, 연간 600%의 배상금을 부과한 벌과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상금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와의 임차인간 분쟁에 따라 발생했으며, 지난 8월 대법원은 이를 부

당이득으로 간주해 전액 반환토록 판결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대법원 반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환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반환 신청을 한 세대에게만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남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는 "공기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에는커녕 오히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받아왔다"며 "불법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을 임대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임대료 연체시 부과 기준(은행권 일반이자율 최저연체이율 수준 이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기자 jwpark@kwangju.co.kr

시설

이제 광주 문화수도마저 혼드나

광주문화수도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오는 2014년 완공될 아시아문화전당의 인력과 운영예산을 대폭 감축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전남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줄여 예산 657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전남 운영인력도 462명에서 296명으로 36% 줄이고 전남 운영비는 1천466억 원에서 859억원으로 42%나 삭감된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은 사업 진행에 따라 재조정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축소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세종시 수정방철에 이어 노무현정부 때 추진된 국책사

업에 대한 축소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별관보존 논란이 해소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조기 준공에 지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때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는 커녕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현 정부 들어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나주에 들어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차질될까 미뤄지고 있고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호남 소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문화수도 사업마저 축소된다면 광주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전남을 방문해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축소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세종시 수정방철에 이어 노무현정부 때 추진된 국책사

소득불평등 해소에 정부·기업 힘모아야

빈곤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5.3%까지 하락했던 상대 빈곤율은 2004년 8%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8.5%로 높아졌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속도도 예상외로 빠르다.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득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민과 영세사업자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비해 경제위기의 타격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기술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심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다. 범죄와 연골 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될수록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 불평등도 고착화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제자리 걸음이며 지방 거주민들은 앞사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복지에 예산을 역대 최고로 늘린 것은 그만큼 민생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 통합도 기대하기 힘들다.

희망근로 가로챈 공무원 가족

광주 24명 ... 전남은 191명이나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희망근로 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무더기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1천124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했다. 이 중 750명은 공무원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374명은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족 중에는 부모가 724명(6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270명(24%), 자녀 94명(8.4%), 형제·자매 33명(3%), 조부모 3명(0.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191명), 경기(99명), 충남·전북(86명), 경남(84명), 경북(77명)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24명이었다. 특히 이 자료는 공무원들이 자진신고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과 지방 교육직 등 다른 직종 공무원 가족의 희망근로 참여 여부는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호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제철 "동호안 제방 응급복구 먼저"

광양제철이 23일 동호안 제방 붕괴 및 폐기물처리장의 침출수 유입에 따른 해양오염 사태 등에 대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선다. 광양제철은 당초 이번 사태의 원인 등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판단, 복구공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 영산강환경영역청 등과 협의해 원인규명에 앞서 응급복구를 먼저 하기로 했다. 광양제철은 사안이 급박한 만

람 내주 중이라도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하고 공사비용은 향후 책임소재가 밝혀진 후 정산받을 계획이다. 이번 동호안 사태는 지난 8월 23일 광양제철 인근 전체 7.7km의 제방 가운데 지점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주변 200여m가 바다 쪽으로 4-5m씩 밀려나고 제방 위 도로 몇 곳에 균열이 생기고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된 것이 발단이 됐다.

동부취재본부=박정호기자 py4079@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눈치껏 떨어 지는것도 있구나

광주·전남 최고 상승 물가 '교육비'

광주·전남 지역에서 8년전 물가와 비교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교육비로 나타나 가계 부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통신비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호남지역 소비자 물가 변화'에 따르면 2008년 호남지역 소비자 물가는 8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광주 29.1%, 전남 26.7%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9.3%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이 지역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었다. 지출 목적별로 교육이 광주 67.4%, 전남 42.8% 등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광주는 식료품·비주류(42.1%), 교통(40.2%) 등이 많이 올랐고 통신(-18.9%)은 하락했다.

전남은 교통(38.8%), 식료품·비주류(35.4%) 등이 상승했으며 통신(-19.1%), 교양·오락(-3.3%) 등은 떨어졌다. 품목별로 광주는 밀가루, 전남은 자동차용 LPG가 가장 큰 폭 상승했고 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휴대전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는 밀가루(181.2%), 자동차용 LPG(180.5%), 금반지(176.4%), 대인 단과화원비(138.5%) 등의 순이었으며 이동전화기(-82.9%), 프린터(-72.7%), 모니터(-65.0%), TV(-60.0%), 컴퓨터 본체(-56.2%) 등이 하락했다. 전남은 자동차용 LPG(177.3%), 금반지(176.7%), 밀가루(169.2%) 순이며 이동전화기(-83.9%), 프린터(-76.4%), 모니터(-72.1%) 등이 떨어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서울지사 02-773-9331 다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경채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